

제9차 금융위원회 의사록

2022. 5. 11.

금 융 위 원 회

1. 일 시 : 2022년 5월 11일

2. 회의방식 : 온-나라 PC영상회의

3. 출석위원

고 승 범 위 원 장

도 규 상 부위원장

박 정 훈 위 원

김 용 재 위 원

정 은 보 위 원

김 태 현 위 원

이 승 현 위 원

김 용 진 위 원

4. 회의경과

(14시 00분 개회)

가. 개회선언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개회를 선언함

1) 2022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9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

- ☐ 2022년도 제8차 금융위원회 회의록과 제9차 금융위원회 안전검토 소위원회 회의결과 보고는 既송부한 자료로 갈음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의결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45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기관 간 데이터 연계를 통해 고객의 자료제공 제출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 (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46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 규정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7호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실 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금융감독원 소속 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신고·통지 의무 위반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또는 면제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8호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외환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하나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과징금 부과 및 위법행위 주도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로 조치하는 내용

- (위원) 그동안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나은행 제재 건은 2차례 의

견진술을 포함해서 4차례의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론을 내렸음. 하나은행이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이 일치하였으나 하나은행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일부정지 처분이 과중하다는 일부 의견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했음. 기존에는 대체과징금으로 제재해온 점을 고려하여 본건까지는 대체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안건검토소위원회에서는 업무정지 기간과 관련하여 가중사유와 감경사유를 비교하여 일부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음. 본건 위반행위는 중과실로 30% 가중이 가능한 반면, 취득이익이 5,000만 원 미만이므로 50%까지 감경도 가능함. 이렇듯 가중사유와 감경사유가 함께 존재하는데, 은행 고유업무인 외국환지급업무의 정지는 영업점 폐쇄에 준하는 중한 제재라는 점, 국내은행에 대하여 외국환거래법상 업무정지로 제재하는 최초 사례인 점, 정릉지점 외에 다른 지점들은 대체과징금으로 제재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정지 기간을 금감원 원안대비 2개월 정도 감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임. 또한 의심거래 미보고 STR 위반과 관련해서는 FIU에서 별도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였음. 동 사항에 대해서는 FIU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에 통보하여 적절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 (위원) 대체 과징금을 부과하자는 의견이나 기타 다른 의견이 있으신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람.
- (위원) 자금세탁방지 관련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중대한 위법사항으로 보아, 당초 영업정지 기간을 6개월로 하는 것이

제 의견이었으나, 의심거래 미보고 STR 위반과 관련해서 FIU에서 별도의 제재도 가능하므로 4개월 정도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 (위원) 이번에는 업무정지로 제재하는 근거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 (위원)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는 하나은행 정릉지점의 외국환거래법 위반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중하고, 과거 위반사례와는 차이가 크며, 여러 차례 경고가 나갔음에도 잘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정릉지점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아닌 업무정지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음. 금번 제재가 외국환거래법을 근거로 한 국내은행에 대한 최초의 업무정지 사례인 점, 그런 인식이 시장에 없었던 점 등 때문에 저희 쪽에서도 상당 시간 고민하였음. 특히 제재수준과 관련하여, 외국환거래법상에 과징금과 업무정지 사이에 다른 조치수준이 없어 업무정지로 제재를 당하는 금융회사 쪽에서는 조금 더 반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지만, 소위원회에서는 일단 금감원의 원안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임. 금융위 전체회의에서 외국환거래법 전체를 보시는 한국은행까지 포함해서 같이 논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전체회의에 논의를 올리게 되었음.
- (위원)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은 본점이 아니고 지점에서 일어난 첫 번째 사례라는 것인지?
- (위원) 예전에 외국계 은행을 업무정지한 사례가 한 번 있으며, 지점을 포함해서 국내은행에 대한 업무정지 부과는 첫 번째 사례임.

- (위원) 지금까지의 제재사례와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업무 정지로 제재하겠다는 것인데, 과거에도 지점에서의 외국환 거래법 규정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 (위원) 외국환거래법 위반사례가 있었으며, 그 때는 과징금으로 제재했던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이것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영업정지로 제재하는 첫 번째 사례여서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상당한 고민을 하였음. 이와 관련, 보고자께서 그간의 제재사례, 제재수준, 근거 등에 대해 명확하게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업무정지에 상당하는 위반사항이 발생해서 과징금으로 대체했던 사례는 작년에 ○○○은행의 거짓자료 제출에 의한 업무정지 같은 과징금 부과조치가 있었음. 그런 사례가 많았던 것은 아니고, 그 사례가 유일함. 2017년 이전에는 사실상 은행법에 근거한 내부통제 소홀 등을 근거로 해서 통상적인 경영유의나 직원제재가 이루어졌었는데, 이후에 감사원 감사에서 위반행위에 관련법이 있을 경우에는 그 법에 근거해서 제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어서 이 사례 같은 경우에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제재수위를 결정하였음. 과거의 외국환 업무 관련 위반 사례는 건수가 작거나 경미한 사항들이었던 것에 반해서 이번에 상정된 하나은행의 위반 건은 위반 기간이나 금액 등 여러 가지 면에서 과거의 외국환거래 위반 사례와는 위반의 정도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중하다는 것

을 감안했음. 정릉지점에 대해 업무정지 부과 건의가 불가피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음. 첫 번째로 (주)◆◆◆◆◆◆◆◆◆◆◆◆◆◆◆◆가 정릉지점 거래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VVIP 고객이었고, 실적 늘리기 차원에서 정릉지점뿐만 아니라 관련된 7개 지점에 불법 외환거래를 3년 동안 계속 나누어주는 식으로 거래를 하면서 정릉지점이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정릉지점의 불법 외환거래의 위반 정도가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함.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의 주의의무도 이행하지 않아 이런 장기간의 거액 불법 외환거래를 조기에 차단하지 못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지점에게도 피해가 발생하였음. 두 번째로 정릉지점은 보고 드린 3가지 문책사항에 모두 해당됨. 위반금액도 2.5억 달러에 달해서 위반 정도가 타지점 대비 매우 중함. 특히 문책사항 ‘가’, ‘나’ 관련 (주)◆◆◆◆◆◆◆◆◆◆◆◆◆◆◆◆의 불법 외환거래 대부분이 정릉지점에서 취급이 됐기 때문에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세 번째로 정릉지점의 위반규모는 과거 조치사례와 비교하여도 매우 중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 중징계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함. 사실 외국환거래법상에서는 개인제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런 위반행위에 대해서 기관제재를 하는 것이고, 과거 사례처럼 은행법에 의한 제재를 한다고 할지라도 주된 행위자에 대해서는 면직 등의 중징계가 불가피한 사항임. 네 번째, 조치대상 지점이 총 8개인데 모두 업무정지 할 경우 이는 과한 측면이 있고, 모든 지점에 대해서 과징금으로 같음하여 부과할 경우에는 정릉지점과 타지점의 위반행위의 경중이 고려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했음. 다섯 번째로 외국환거래법상 업무정지 조치는 국내은행 같은 경우에는 첫 사례이지만, 2018년도에 ○○은행에서

업무정지 같은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고, 외국계은행으로는 멜라트 지점이 이란 제재 관련 위반으로 2개월 업무정지를 당했음. 이러한 것들을 감안했을 때 국내은행에서도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을 경우에 중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으로 판단했음. 만약에 최초 사례라는 이유로 제재수준을 과징금으로 대체할 경우 향후에 이러한 중대한 위반행위가 발생해도 그에 상응하는 제재를 할 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음. 여섯 번째로 금번 위반행위는 은행 전체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가 원칙이고 대체과징금 부과 여부는 전체 위반행위 정도나 고객불편 등을 감안해서 판단을 해야 됨. 마지막으로 문책사항별로 업무정지나 대체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위반행위에 따라서 전체지점에 대해서 업무정지나 대체과징금을 부과해야 될 수가 있다는 점도 고려했음.

- (위원) 2018년도에 ○○은행 제재 시 최초로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했고 그 이전에는 은행법이 적용됐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맞는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결국 이번이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재를 하는 두 번째 사례이고, 지난번에는 과징금으로 같음을 했지만 지금은 업무정지라는 중징계를 하게 되므로, 첫 번째 제재사례와 이번이 어떻게 다르냐에 대해서는 정확히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음. 어떤 결론을 내리든 간에, 2018년 ○○은행 사례와 비교해서 그 때는 왜 과징금으로 같음하여 부과했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

- (보고자)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전에 보고 드렸던 2018년도 ○○은행 업무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사례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은행 검사 시에 ▲▲▲▲이라는 업체가 ○○은행과 외국환거래할 때 제출했던 증빙서류 일체를 요청했었는데 ○○은행 측에서 당시에 제출받은 증빙서류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사후적으로 업체에다가 증빙서류를 보완해달라고 한 후 그 자료를 저희한테 제출했고 그에 대한 제재였습니다. ○○은행 사례는 거짓자료제출에 대한 제재가 핵심이고, 고의성은 있었지만 일회성이라는 사실을 감안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건수, 금액, 종류가 크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 당시에는 업무정지 조치는 과도하다는 판단으로 과징금을 부과했었던 것입니다. 반면, 하나은행의 경우는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큰 금액인 2.5억 달러 이상의 불법거래가 지속됐다는 점, 그리고 국내 굴지의 은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오랜기간 이런 불법 외환거래가 지속되도록 조장했다는 점을 고려한 것입니다.
- (위원) 제재수준을 조정하는 논거 중 최초의 업무정지 사례라고 한 부분은 설명에서 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은행 사례로 외국환거래법상 제재가 이미 있었고, 이번이 외국환거래법을 적용하는 두 번째 사례인데 굳이 제재수준을 과징금으로 대체 적용할 필요가 있겠느냐는 생각입니다.
- (위원) ○위원님께서 6개월에서 4개월로 조정하는 것은 동의하시고, 다만 제재수준 조정에 대한 논거를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신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 (위원) 그러함.
- (위원) 일리 있으신 말씀임.
- (위원) 정릉지점의 모든 업무에 대해 영업정지하는 것이 아니고 외국환업무만 못하게 하는 것이고, 따라서 인근 영업점들을 통해 외국환업무 영업을 가능함. 즉, 하나은행은 정릉지점 거래 기업에게 정릉지점이 아닌 다른 지점에서 거래가 가능하다고 안내하면, 하나은행 전체로는 큰 경제적 피해가 없으므로 정릉지점의 업무 일부정지는 상징적인 의미 정도일 것 같음. 정릉지점에 계셨던 지점장님이나 그때 업무를 했던 직원이 제재를 받긴 하겠지만 하나은행 전체적으로는 지점 하나 업무정지를 당했기 때문에 내부통제에 있어서 나쁜 평판을 받을 수 있는 그 이상은 특별히 피해가 없는 것 같음. 상징적인 의미에서 이 정도 업무정지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취지로 한다는 것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 의견이 없음.
- (위원) 보고자께서 어느 정도 제재효과가 있는 것인지, 지점에는 어떤 영향이 있고 은행 전체로 보면 어떤지 설명해 주시기 바람.
- (보고자)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정지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신규 외국환 지급수령거래만 정지되는 것임. 전체 거래가 업무정지가 되는 것이 아님. 외국환업무도 전부가 정지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 거래에 의한 지급수령은 여전히 할 수 있고 신규 거래만 정지대상이 됨. 그리

고 과거 5년 동안의 실적을 볼 때 정릉지점의 업무정지 대상이 되는 업무의 비중이 실적 기준으로는 지점 전체 여신 포함해서 한 000% 정도 됨. 수익 기준으로는 대략 한 000% 정도밖에 안됨. 그래서 실적기준은 약간 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수익기준으로는 거의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거래고객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2021년 중에 대면고객 수가 000명임. 지정거래 고객이 한 00명 정도 됨. 이런 분들은 이미 작년부터 제재 절차가 진행이 되면서 사전안내 비슷하게 된 부분도 있고, 근처 15분 이내 거리에 타지점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은 있을 수 있지만 고객들이 거래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무엇보다 엄중한 위반사실이 있는 것에 대한 일정 부분의 피해가 불가피한 것은 고객들도 감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함.

- (위원) 저도 사실 처음에 보고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6개월에서 4개월로 검토하셨다고 해서 왜 4개월로 하셨나 했더니 문책사항 3가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이해가 됐음. 사실 제재라는 것이 그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서 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것은 아까 보고자가 설명한 것처럼 중대한 측면도 있어서 안전검토소위원회에서 논의한 것처럼 결론을 내도록 하겠음.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148호 안전과 관련하여, 하나은행에 대한 조치를 다음과 같이 안전소위 수정심의안대로 수정의결 하겠음. 은행 고유업무인 외국환 지급업무의 정지는 영업점 폐쇄에 준하는 점 등을 고려시, 원안의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기간은 과중한 측면이 있음. 이에 따라, 정릉지점에 대한 업무의 일부정지 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변경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 하겠음. 그 외에, 나머지 조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 의결함

□ 의결안건 제149호 『부산은행(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부산은행(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위법사항에 대해 과태료 부과 및 신분제재 조치하는 내용

○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의결함

3) 보고안건 심의

□ 보고안건 제31호 『△△△△△△△ 등 3개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 등 3개 회사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심사 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 보고안건 제32호 『2021년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2021년 저축은행 대주주 정기 적격성 심사결과를 보고하는 내용

- (위원) 현재 법상 지분을 10% 이상인 부적격 대주주에 대해서 주식처분명령을 하도록 하고 있으나 적격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10% 이하 최대주주에 대한 적절한 관리방안 모색도 필요해보임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최대주주 적격성 심사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 방안을 검토 하겠음
- 원안대로 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대로 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2년도 금융위원회 제9차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4시 53분 폐회)